

민주 “검수원복’ 시행령 철회”… 한동훈 “시행령 사수”

법사위 전체회의의... 여야 ‘검수원복’ 현재 결정 놓고 공방 국수본부장 ‘정순신 사태’ 관련 인사 검증 문제도 도마

여야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원복’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현재는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통과시켰던 검수원복법에 대해 ‘위장탈당’ 등을 통한 법사위 심사 과정은 위법했지만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결정을 근거로 ‘검수원복’ (검찰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의 원상 복구와 함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책임 표명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등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를 차단하기 위해 시행령 철회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수원복의 시행령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현재 결정에 대해 “국회 고유의 입법 사항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각하 판결을 했다”며 “입법 취지를 존중해서 시행령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현재의 각하 결정은) ‘장관이 검사가 아니다’·‘지휘감독권의 규정도 아니다’, 그래서 운동장에 들어와서 축구할, 공을 잘 자격이 없다고 해서 각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강욱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도대체 현재의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 본인 스스로 좀 돌아보면 좋겠다”라고 쏘아붙였다.

반면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내려진 결정이 과연 정당한지의 문제”라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성향을 부각하며 편파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결정된 유의미한 것은 민형법 외원의 위장탈당 등이 법사위원들의 심

의표결정을 침해했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사과와 민 의원의 의원직 사퇴 요구에 맞불을 놔다.

전 의원은 또 시행령 원상 복구 요구에 관해서도 “검수원복법에 민주당이 집착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리담기”라며 “오늘 뉴스에 위증교사 의혹이 있다. 현재 시행령으로는 위증이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아닌가. 검찰의 직접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으니까 민주당에서는 시행령 원상 복구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검수원복은) 지금 보도된 이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 결국 수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한동훈 장관은 ‘검수원복’ 문제와 관련, “도대체 강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못 하게 되려면 하는 그 이유를 묻고 싶다”며 “오히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위증이나 무고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드러나는 부분”이라며 “검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공익이 훨씬 증진되는 등 시행령 개정으로 완전히 개선되는 추세가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결정과 관련, 사과 입장 표명 여부에 대해 “재판관 9명 중 4명은 청구인 적격을 인정했다”며 “입법 과정에서 위장 탈당 같은 위헌·위법이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사과는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한다”고 역곡하기도 했다.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사태와 관련한 부실 인사 검증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 변호사 자녀 학교 폭력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박주인 의원은 “장관이 처음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 때 (인사검증시스템을) 보다 투명하게 만



이탄희 “허술한 인사 시스템 개선이 장관 본업”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들고, 효과적으로 하겠다는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탄희 의원은 한 장관이 정 변호사 자녀 사건 판결문에 접근 권한이 없었다고 설명하자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나. 개선을 하는 게 장관의 본업”이라고 다

그쳤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인사검증 문제 등과 관련해 언급을 삼가면서, 한 장관에게 현재 결정 및 검수원복 시행령 등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며 “방어막”을 쳤다.

한편, 한 장관은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와 관련한 부실 인사 검증 논란에 “(아들의 학교폭력을) 제가 알았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與 정책위-용산 국정기획 ‘핫라인’ 가동

尹, 당정 긴밀협의 지시

국민의힘 박대출 신임 정책위의장과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간에 당정 정책 공조를 위한 ‘핫라인’이 가동된다.

정부가 정책 구상 단계부터 당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민의 의견을 온전히 반영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부에 따른 시도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27일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고 이도은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라”고도 했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최근 당정 간 소통을 유독 강조하고 있다”며 핫라인 가동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박 의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주요 당직 인선이 마무리되는 것과 맞물려 당과 대통령실 간 채널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전망이다.

사실상 정책실장 역할을 맡아온 이 수석은 박 의장의 카운터파트로서 주요 정책에 대한 사전 조율 작업에 적극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수석실의 위상과 역할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를 통해 노동·교육·연금개혁 등 3대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게 윤 대통령 생각이라고 한다.

윤 대통령은 최근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이 잘못 설계되고 홍보되면서 MZ 세대를 중심으로 한 민심 이반을 경험했다고 보고, 제대로 된 정책 마케팅을 주문해왔다.

정책을 발굴할 때부터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야 수용성을 높이고 성과도 낼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렸다. 당정 간 소통 채널 활성화는 당이 정책위 산하

정책조정위원회(정조위)를 복원하는 등 정책 기능을 보장하는 것과 일치하는 흐름이다.

김기현 당 대표가 윤 대통령과 정세 회동을 건의하고, 당과 정부 그리고 대통령실 핵심 멤버가 참석한 고위 당정협의회를 수시로 열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분석된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0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대통령(이 주관하는) 행사에 의원들의 참여를 늘리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당 지도부 출범을 계기로 정부의 심기일전을 거듭 노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청사에서 회의를 주재할 차례지만, 윤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한 ‘각별한 당부’를 위해 직접 나서는 것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尹 지지율 ‘36%’ 3주 연속 하락

리얼미터, 부정평가 61.2%...국힘 37.9%·민주 45.4%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3주 연속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렌드 의뢰로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8%p포인트(p) 하락한 36%로 집계됐다.

이달 초 40%대였던 긍정 평가는 최근 3주 연속 하락세(42.9%→38.9%→36.8%→36%)를 보였다. 긍정 평가는 대구·경북(6.9%p ↑), 60대(2.9%p ↑), 30대(5.3%p ↑) 등에서 주로 올랐다.

반면, 부정 평가는 지난 조사보다 0.8%p 오른 61.2%를 기록했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강제징용 해

법, 한일관계 악재, ‘주 69시간’ 논란 등 대형 복합 악재가 연이어 발생하는 상황에서 제도 모멘텀이 무엇인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주요 국정 과제를 들고 직접 진화에 나선만큼 그에 대한 지지층의 반향이 있는지가 (지지율 하락세) 제도 여부와 직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전주보다 0.9%p 오른 37.9%, 더불어민주당이 1.0%p 내린 45.4%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3%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임대차 보증금·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법인회사 신용상태 파악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봄에 떠나는 그립은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승선문의
061-834-3434
예약센터
메이투어 : 062-385-0515
투어나우 : 062-575-8019